■ 부끄러운 지역사회 뇌물 백태

아파트·車·여행·골프… 생활 곳곳에 '뇌물 범벅'

아들 여자 친구 임신중절 수술비까지 챙겨

최근 비리사건에 등장하는 뇌물은 주로 5만원권으로 전달된다. 부피가 작아 주변 시선에 노출되지 않고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전달경로는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다.

뇌물은 봉투, 쇼핑백은 물론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유명브랜드 가방에 담겨 자동차안이나 카페, 식당, 연구실, 집무실 등에서 오간다.

받는 사람이 구체적인 항목을 설명하며 업체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정해진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은 물론 선금을 받고 '청탁'이 '특혜'가 되면 나머지를 챙기는 등 거래방법도 다양하다.

보해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모(56)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2009년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로부터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2억원을 받는 것도 모자라 1억2000만원 상당의 현금카드를 받았고 17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긁었다. 현금·신용카드는 보석 등 고가품을 사거나 유흥비나 식비, 쇼핑 등에 사용됐다. 정모(50)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2010년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다며 4100만원을 챙겼다. 김모(45) 전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은 전국 8곳의 상호저축은행에 자신의 부인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에 22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해 1450만원의 수당을 받도록 하기도 했다.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 사건의 경우 업체들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기술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13명에게 1000만~4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 일부 심사위원은 복수의 업체로부터 돈을 챙겼고, 공짜 여행이나 골프 접대도 받았다. 일각에서는 공사 규모로 볼 때 이들 심사위원들이 받은 금액은 선금에 해당되며 시공사 선정 이후 나머지를 받기로 돼 있었다는 입소문도 나오고 있다. 시공사 선정 뒤 심사위원 교체 등 문제가 일자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 전 총무처장 김모(55)씨는 업체 3곳에 공사를 밀어주고 1020만원, 8700만원, 2500만원을 수수했다. 자신의 집무실,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봉투나 쇼핑백에 담긴 1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받고 일부는 차명계좌로 받기도 했다.

광주의 한 신협 여신과장인 송모(42)씨는 허위서류를 내민 업자에게 55억8900만원을 불법대출해주면서 33차례에 걸쳐 100만원 자기앞수표, 현금, 가족 명의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1억9426만원을 받았다.

송씨가 업자에게 요구한 뇌물 항목은 골프세트 및 레슨비, 승용차 구입, 자신의 집들이 선물 소파 및 벽걸이 TV 가전제품 일체 구입, 행사 협찬비, 서울지역 한 대학 최고위정책과정 등록비 및 부대비용, 매제 차량구입비, 아들 여자 친구 임신중절 수술비 등이었다.

LH공사 보금자리본부 택지설계처 과장으로 근무하다 올 초 퇴사한 이모(41)씨는 업자에게 뇌물 5650만원을 받고 법인카드로 1630만원을 썼다. 이 법인카드로 그는 유흥주점, 골프장, 모텔 등을 드나들고 회식비, 주유비, 자동차 수리, 마트 쇼핑까지 해결했다. 광주광산경찰 송모(43) 경사는 지난 2009년 8월 북부경찰서 근무 당시 같은 업자로부터 자신이 고소된 사건과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00만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를 받았다.

건강심사평가원 본원 의료급여부 과장 강모(51)씨는 지난 2007년 한 병원 원장 부인으로부터 감사를 잘 봐달라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4년 만에 들통나 법정에 서기도 했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수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는 경우 목돈으로 주택이나 차량 구입 등에 쓰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상적인 소비생활에 사용할 만큼 거리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명예를 소중히 해야할 공무원, 교수 등 공직자들이 지나친 과소비를 일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뇌물 비리 왜 반복되나

'불투명 사회'가 뒷거래 유혹

벌금형·집유 등 가벼운 처벌도 원인

뇌물이 연관된 비리사건이 잇따르는 원인은 그만큼 사업·공사 발주, 승진·이동 인사 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이로운 조건 제시,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발주는 물론 인사위원회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 기관장 등에 의해 좌우되는 인사 등에 대한 문제가 수차례 제기돼왔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뇌물을 주고 받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감시도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뇌물죄의 가중처벌은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하,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7년 이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 이하인 경우는 범행 횟수, 과거 경력, 반성 유무 등에 의해 집행유예, 벌금 등에 그치는 경우도 상당수다.

실제로 광주지방법원은 올 초 1심에서 병원 원장 부인으로 500만원을 받은 건강평가심사원 과장 강모(51)씨에게 자격정지 1년, 추징금 500만원, 돈을 건넨 김모(여·50)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건 처리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받은 광산경찰 송모(43) 경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00여만원의 형을 받았다.

허위서류를 내민 업자에게 55억8900만원을 불법대출해주면서 1억9426만원을 챙긴 광주의 한 신협 여신과장인 송모(42)씨는 지난 18일 2억원에 가까운 뇌물 액수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9426만원을 선고받았다.

총인저감시설 비리사건과 관련 뇌물을 받은 기술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대부분은 수수액이 1000만~2000만원으로,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남의 한 군수는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뇌물을 건넨 사람이 말을 바꿔 무죄가 선고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리사건은 좀처럼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금액과 함께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행수법을 감안한 가중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공사·인사 관련 시스템의 개선, 청렴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뇌물수수에 대한 단호한 처분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 정상 개방 올들어 처음으로 무등산 정상이 개방된 28일 등산객들이 천왕봉(해발 1187m) 옆 지왕봉의 군부대 안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이날 중봉 3거리에서 정상에 이르는 무등산 등산로에는 평소 주말의 3배 가량인 3만여명이 찾아 산행을 즐겼다. 산행객들은 중봉 3거리→누에봉→군부대 정문→정상(지왕봉 일원)→후문→서석대 탐방노선을 걸으며 봄정취를 만끽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與野 "쇠고기 수입 중단" 한목소리

민주, 재협상 촉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BSE) 발견과 관련, 정치권에서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으며 민주통합당은 더 나아가 미국과 재협상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광우병 사태 파악이 우선이라며 정부 입장을 거들다가 입장을 바꿨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경남 창원의 경남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위생과 안전보다 무역마찰을 피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역학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최종 분석 결과 조금이라도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수입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대행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서 검역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검역 중단'보다는 '검역 강화'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